

박지원 vs 조정식 vs 김태년 3파전

후반기 국회의원 선거

차 유일한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출신
趙 '진명' 핵심... 김 계파 색은 정책동
'8월 전대 전초전'... 권리당원 20% 반영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22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원 선거전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5선)·조정식(6선)·김태년(5선)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일인 지난 4일 박지원·조정식·김태년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 1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된 뒤 본회의 표결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민주당 경선 승자가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돼 주목된다. 오는 11-12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당일 재직의원 현장 투표(80%)를 통해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당 안팎에선 당심의 향배를 살필 수 있는 '8월 전당대회 전초전'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내에선 조·김 의원이 의원투표에선 호구세를 보이는 가운데 높은 인지도에 힘입은 박 의원의 온라인 당심 투표 결과가 최종 후보 선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민생 경제를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출마 선언문에서 "최고의 정치는 협치이지만 '윤(尹) 어게인' 세력들은 배려하지 않았다. 당장 6월부터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월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가 의장이 됐을 때 권력구조까지 포함해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며 "내각제에 대해선 반대하지만 4년 연임제·중임제 등 디테일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선 "저도 (조작기소의) 당사자로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동병상련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면 지도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높은 대중적 인지도가 강점이다.

특히 권리당원 수가 가장 많은 호남 지역을 정치적 배경으로 삼는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개혁 입법 처리에 앞장서면서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명(진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은 "민주당의 파란 피가 흐르는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23대 총선 승리,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 특검법은 도입해야 한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당 지도부가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으니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대통령 정부 특보로 위촉되면서 국회의원 후보군 중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인증'을 받았다는 당 안팎 평가도 나왔다.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을 통해 "상임위의 고의 지연·파행을 막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의장은 당적이 없고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여러 과제를 헌법에 담아내는 개헌을 22대 국회가 꼭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적 뿌리는 진노(진노무현)·진문(진문재인)에 두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얇은 당내 '정책동'으로 꼽힌다. /김진수 기자



어린이들과 녹지원 향하는 李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해경 여사가 5일 어린이날 초청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청와대 녹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靑 "美 호르무즈 제안, 국내법 절차 감안 검토"

"해상물류 안정 여러 국제노력 참여

트럼프 언급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

청와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에 군사작전 참여를 촉구한 것과 관련,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청와대는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돼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안정, 회복, 정상화를 위해 여러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미는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우리 선원·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으며, 유관국과도 필요한 소통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지방선거 후 처리' 무계

李대통령 속의 당부에 속도 조절

당내선 처리 시점 두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애초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특검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이탈 우려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특검 도입 절차에서 속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내부적으로 속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하려고 한다"며 "의견 수렴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지, 속의 과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처리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내에서 의견을 나누겠다"고 설명했다.

애초 '전광석화 입법'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속의를 당부하고 지선 격전지에 출마한 후보들의 우려가 함께 터져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속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안 처리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특검법안 처리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고 특검의 정당성이 있는 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법안을 두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인 민주당은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문제 삼는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조계원 "정윤석 감독 벌금형은 부당한 판결"

'서부지법 폭동' 때 폭력 현장 촬영

"공익 기록 미인정 형식적 법 적용"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은 5일 지난해 '서부지법 폭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정윤석 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된 것과 관련,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시위대의 폭력현장을 기록하던 행위까지 형사처벌한 이번 판결은 공익적 기록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정 감독은 당시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폭동 현장을 기록한 감독을 폭력 가담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이 같은 판단은 공익적 기록활동 전진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언론 취재는 인정하면서 독립적인 기록 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기준의 불일치"라며 "공익적 기록 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